

일본의 금융 산업 위기와 시사점

임진국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국제경제학

경제 대국 일본의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산업 경쟁력의 원천 가운데 금융의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금융 산업도 그동안 수출 주도 성장 과정에서 많은 규제와 보호 속에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창 논의 중인 국내 금융 산업 개편과 금융 자유화는 국내 금융 기관들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금융 위기는 다시 한번 금융 자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기관 경영의 건전성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 심화되는 일본 금융 위기

최근 일본은 심각한 금융 위기에 처해 있다. 혹자는 은행 도산이 계속된다면 거액의 예금 인출이 일어나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일본의 금융 위기가 일본 경제의 불황 탈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본 금융 불안이 지속될 경우, 일본 금융 기관들의 해외 업무 축소와 자산의 본국 환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금융 기관의 불량 채권 총액(불량 채권, 연체 채권 및 금리 감면 대상 채권의 합계 금

액)은 금년 3월 말 일본 GNP의 10% 수준인 40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간접 금융의 비중이 높아 금융 기관의 대출 잔고가 미국의 2 배 이상,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의 합계액과 거의 같은 규모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대출 잔고에서 불량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의 1991년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종전에 세계 최고의 자산 규모를 자랑하던 일본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크게 낮추어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로 시장에서는 歐美 은행들이 일본 금융 기관에 대한 달러화 용자시 종전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여,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도시 은행에 대해 LIBOR에 가산 금리 0.06~

0.1%를 요구하였다. IMF도 최근 국제 자본 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 기관을 도산시키지 않고 수익 회복에 의한 정상화를 기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고 부실 금융 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촉구하였다.

<표 1> 美 무디스社의 은행 신용 평가 등급

(단위: 개)

등급	상태	국가별			비고
		미국	영국	일본	
A	매우 탁월한 재무 내용	3	1	0	
B	좋은 재무 내용 유지	17	4	0	B+
		65	10	1	B
C	비교적 양호한 재무 내용	116	4	3	C+
		78	4	10	C
D	일정 수준 재무 내용 충족	9	1	10	D+
		0	0	18	D
E	매우 취약한 재무 내용	0	0	7	E+
		0	0	3	E

■ 금융 위기 발생의 배경

80년대 후반 거시적으로 자금 잉여 하에서 금융 자유화가 진전되었고, 각 금융 기관은 80년대 후반 재테크 열풍 속에서 종래보다 융자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면서 무분별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의 극단적인 상승과 하락이 발생하였고 특히, 90년대 초 경기 후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담보 가치를 크게 하회함으로써 담보부 대출금이 대량 부실화되었다.

이번 금융 위기의 발생이 경기 침체 장기화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일본금융제도와 관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현지의 일치된 시각이다. 즉, 대장성은 소위 호송선단식 금융 행정으로 금융 기관들로 하여금 책임 경영에 힘쓰기보다 할당식 대출을 시행토록 하였다. 당초 은행들이 무리한 부동산 관련 대출과 투자를 하는 데 아무런 사전 제재가 없었던 것도 금융 감독 체제의 허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들도 위험 관리없이 방만하게 자산 운용과 무리한 대출을 행하였고,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대한 솔직한 공시는 뒤로 한채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많은 예금을 유치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재무 내용이 극히 악화되어 실질적으로 도산에 빠졌더라도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경영자도 그것을 강하게 희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산 처리가 늦어져 그 비용이 확대되었다.

■ 일본 금융 당국의 대응

일본 금융 기관들의 대량 부실 채권을 완전 해소하는 데 앞으로 5년 정도의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은행은 일본 금융 기관의 해외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에 예치한 달러화 자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 금융 당국은 부실해진 금융 기관의 과

감한 청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기관의 통합, 예금보험제도의 사전 감시 기능 강화, 공적 자금 투입에 있어 시장 경쟁 원리의 중시 등 정책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채권에 대해 예금자의 자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21개 은행들은 1996년 3월부터 부실화 채권, 연체 채권 및 금리 감면 채권에 관해서도 공시할 예정인데, 다른 금융 기관도 신용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의 조치에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채권 처리의 방법

불량 채권의 처리는 금융 기관의 합리화 노력, 신속한 충당, 상각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장부상의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보 부동산의 유동화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예금 보험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철저한 합리화 계획의 책정과 관계 금융 기관 등에 의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도산 처리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보면, ① 금융 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기 시정과 도산 처리 절차의 신속한 시행, ② 도산 처리 방법의 다양화, ③ 당면 도산 처리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한 민간 자금 동원의 구조 정비 등이 있다. 이외 이번 개별 금융 기관의 도산

처리에 의해 예금보험기구의 책임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어, 예금 보험료의 인상과 일본 은행의 차입 규모 확대가 실시될 것이다.

신용조합 등의 경영 건전성 확보

도쿄 2개 신용조합의 도산과 도쿄, 오사카의 신용조합 도산의 기본 배경은 도시의 신용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상호 부조'라는 기본 이념과 현실의 신용조합 업무 운영간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여 경영자에 의한 방만 경영을 시정할 수 없었던 데에 있었다.

이에 따라 협동 조직을 중시하는 경영 방침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행정상 시정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동시에 신용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체·국가간의 연대 강화 정례 협의를 설치하고 역할 정비, 공동 검사 조건의 명확화 등이 추진되며, 신용조합의 도산 처리에서 관련 비용의 부담 방법, 한시적인 부실 금융 기관의 정비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 등이 요청되고 있다.

신용조합도 공시제도의 추진에 동참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사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일반 금융 기관화되어온 신용조합에 관해 이사의 겸직에 대한 제도적 제한과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둘째, 외부감사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 문제

현재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의 부실 채권 처리 문제로 각계의 의견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住專의 불량 채권이 상당히 많고 관련된 금융 기관도 많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住專 문제가 현재 불량 채권 문제 가운데 상징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住專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왕성한 주택 자금 수요에 부응해왔는데, 금융 기관들에 의한 공동 출자로 개인에 대한 주택 론(loan)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후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간 금융 기관이 개인에 대한 주택 금융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주택 금융 공고의 역할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住專은 당초 목적인 개인에 대한 주택 론(loan) 제공에서 차차 주택 개발 업자, 부동산 업자에 대한 용자에 치우치게 되었다. 이때 住專의 자금 공여자인 금융 기관 특히, 농협계 금융 기관은 부동산업에 대한 자체 용자의 총량 규제가 행해지자 住專에 대한 용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행정 당국도 住專이 예금 거래 금융 기관과 다르므로 住專의 용자 확대에 대해 충분한 지도를 행하지 못하였다.

버블 붕괴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용자가 불량 채권화되고 住專의 경영을 압박하게 되었다. 住專은 2차적인 입장이고 모은행이 주

체가 되어 재건 계획을 책정하고 재건을 피하였지만, 금리의 하락과 地價의 지속적 급락으로 현재 발본적인 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일본 大藏省이 1995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住專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住專 8 개사의 불량 채권의 합계액은 8.4조 엔, 이 가운데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은 6.3조 엔으로 추정되었다.

住專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방침이나 채권의 처리 방법에 관해 합의 도출 과정에서 농협계 금융 기관이나 일반 금융 기관도 책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행정 당국은 전체의 구조적인 정비를 검토하여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住專이 안고 있는 불량 채권의 회수에는 장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불량 채권의 처리를 담당할 기관의 구성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많은 불량 채권에 대한 대응은 금융 기관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계적인 대응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금융 개혁 문제

이와 같이 일본의 금융 위기 극복 방안은 결국 금융 업계 자체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금융 산업의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은 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금융 시장의 효율화와 금융 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 개혁 및 금융 자유화를 실시해왔

안전망의 재구축

다. 이러한 금융 자유화의 진전 과정은 금융 기관에 있어서 리스크의 증가 과정으로서, 각 금융 기관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 기관들이 이를 소홀히 하기 쉬우며, 감독 기관도 자기 책임 원칙에 철저히 하고 시장 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님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금융 자유화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응이 요구된다. 서구 제국의 경험에서 지적되는 대응 과제에는 공시제도의 촉진, 금융 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 예금자의 자기 책임 원칙의 확립 등이 있다. 또한 시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 기관이 부실 금융 기관 경영의 조기 시정, 금융 기관이 도산할 경우 투명성 있는 부실 처리 방법의 정비, 예금보험제도의 확충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금융 자유화의 추진 과정에서 금융 업계의 기득권 주장에 부딪침으로써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주의적인 방식이 채택되었다. 즉, 은행·증권·보험의 기존 금융 체계에서 상호 진출을 허용, 규제외 벽이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취약한 금융 기관들에 의해 구성된 기득권 집단의 입김이 작용하였고 그만큼 금융 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성과가 뒤쳐지게 되었다. 특히, 금융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규제 당국의 체제 즉, 금융 안전망(safety net)의 정비·확충이 미흡하였다.

한편, 불량 채권의 조기 처리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향후 5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불량 채권을 처리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첫째,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은행을 선별함으로써 은행에 대해 위험 선택에 규율을 부여하게 되는 소위 '시장 규율'이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행에 대한 채권자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 개별 은행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경영 내용 특히, 불량 채권에 관해 철저한 정보 공시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 금융 당국은 개별 은행의 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집된 정보를 公共財로서 시장에 공시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 시사점 및 우리의 과제

이러한 일본의 금융 위기 현상은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해외 자금 조달 금리 상승 등의 악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일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가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일본 은행이 자금 조달한 해외 시장에서 적용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 금융의 제도나 관

행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일본의 금융 위기와 그에 대한 해결 노력이 국내의 금융 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도 수많은 대소형 금융 사고가 발생해왔다. 그때마다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우리 정부는 시장 논리에 의한 처방보다는 국내 2차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금융 기관의 채무 탕감과 정책 자금 지원에 의한 사후 약방문이 대부분이었다. 은행들도 강제로 떠안은 低利의 통화 안정 채권 부담, 부도 기업의 부실 채권 부담 등으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또한 신탁 자금의 주식 투자화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국내 은행들은 금년 들어 건설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잇단 도산에 따라 부실 여신이 급증하였다. 지난 6월 말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을 포함한 7대 시중은행의¹⁾ 부실 여신은 2조 386억 원에 달함으로써 1994년 말 1조 4,779억 원에 비해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의 경우와 흡사하게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과 비교할 때 금융업의 상대적인 비효율성에 직면해 있다. 이는 얼마전 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금융 부문이 48 개국 가운데 34위라는 평가에도 여실히 반영되었다.

그 배경은 정부의 과보호와 지나친 규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산업 개편과 금융 자유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관치 금융의 관행,

관련 업계의 이해 상충에 따른 방향성 상실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금융 산업의 겸업화와 전업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아직 모호하다. 시장 경쟁 원리에 입각한 자발적인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충분치 못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금융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금융 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금융 당국이 금융 산업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한 금융 기관들의 이해 조정자보다는 합리적 감시자, 정보 수집·제공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경영 상태가 악화된 금융 기관들에 대해 사전적인 경영 감시 체제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트럭처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치 금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은행의 경영 형태를 자율적인 구조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금융 시장 개방에 대비한 은행들의 대형화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경영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무 상태의 달성없이는 위험 천만한 일이다. 따라서 금융 기관들은 철저한 자기 책임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자기 공시(disposure)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화 자산이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지나치게 투기적인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 담보 대출 중심에서 신용 평가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용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1)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국민, 외환은행.